격월간 NEWS LETTER

더 불 어

(9·10월)

발행처-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 **발행인**-최상철 | **기획**-홍보팀 | **홈페이지**-www.region.go.kr | **통권4호**

Contents

- 정책 핫이슈 ····· 1
  "친서민 지역발전, 〈기초생활권〉으로 다진다"
- 정책 포커스 ····· 2
  광역위원회, 사무국 진용 갖춰 공식출범
  지역좇 기초생활권 정책포럼 결과요약
- 위원장 메시지 ····· 3
  "163개 시·군 기초생활권의 중요성"
- 지역 안테나 ····· 4
  충청, 부여군 굿뜨래 멜론 해외진출 탄력
  충청, 보령 돼지고기 세계화 다시 추진
  동남, 창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창에 그린' 선정
  대경, 경북 동해안 10대 명품탐방로 조성
  강원, 중복규제 토지 이용가치 높인다
  호남, 전남 사계절 전지훈련장으로 각광
  호남, 목포시 관광목포 콘텐츠로 빛낸다
  제주, 2012 세계자연보존총회 유치 서명 110만 돌파
- 중앙 풍향계 ····· 6
  경기회복 지속 위해 4/4분기 예산 조기 집행
  지능형 홈 1단계 시범사업 실시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지역 공모
  지방주도형으로 지자체 규제개혁 틀 개선
  지자체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지원
  2010 서울 떡볶이 페스티벌 준비 박차
  2009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 글로벌 인사이트 ····· 8
  해외정책 사례연구 - 일본 기초생활권

정책 핫이슈

"親서민 지역발전, <기초생활권>으로 다진다"

- 2009년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대통령 정책보고 요약 -

▲2009년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보고회의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역委)가 '광역경제권' 에 이어 '기초생활권' 발전시책을 선보였다. 지역委는 지난 9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2009년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보고' 를 통해 ▶기초생활권 추진방향 ▶10대 중점과제 ▶효율적인 지원체계 등을 제시했다. 지방교육 활성화(교과부), 지방재정 확충(행안부), 지역발전 5개년계획안(지경부)도 함께 논의한 이번 보고는 親서민 민생정부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보고의 키워드는 줄탁동기(啐啄同機)다. 병아리가 알에서 나올 때, 새끼와 어미닭이 안과 밖에서 동시에 껍질을 깨는 것처럼, 지방과 중앙의 공동노력을 제안했다. 각 지역의 자생력(S/W중심)+삶의질(교육·의료)+지방재정(소득·소비세)을 키워 지역이 앞장서면,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초생활권을 키운다는 전략이다. 특히 '10대 중점과제' 는 **내발적 발전 5대 과제**(①지역자산 상품화 ②향토산업 브랜드화 ③역사·문화 장소마케팅 ④지역리더 양성 ⑤지역간 연계·협력)와 **국가지원 5대과제**(①지역의료·복지개선 ②지역문화·복지 향상 ③지방교육 활성화 ④지역 생활여건 개선 ⑤지역 녹색성장 지원)등 지역내부와 국가지원의 공동노력으로, 163개 시·군의 산업적 자생력과 교육·의료·문화적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또 기초생활권의 '효율적인 지원체계' 를 위해 인구·소득·서비스 접근성 등 지역특성을 감안해 유형별·발전단계별로 국고지원을 차등화하고,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해 중앙의 간섭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강조된 것은 자연·역사·문화 등 지역자산을 활용한 상품화·산업화다. 그동안 H/W중심으로 추진돼 온 지역발전은 스토리텔링 등 S/W의 상품화로 전환, 전국 인구의 54%가 살고 있는 기초생활권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지역발전 5개년계획안' 은 MB정부 지역정책의 종합판이다. 5개년계획은 지역정책의 기조를 균형에서 성장+균형의 새로운 틀로 재편,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만든 親서민 민생정부의 지역발전정책들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핵심정책인 광역경제권이 정착되도록 선도산업·인재양성·선도프로젝트 등 52조원의 광역사업을 당초대로 지원하고, 2013년까지 5년간 총126조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2면 계속 〉

정책 핫이슈

지역委는 이번 '기초생활권 발전시책' 보고에 이어, 올 연말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 을 대통령께 보고함으로써, 광역경제권-기초생활권-초광역개발권 등 MB정부의 3차원적 지역발전정책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다음은 9월16일 진행된 지역委 보고 당시 대통령 말씀과 참석자들의 주요발언 요지다.

··나는 기본적으로 지방분권주의자이며, 항상 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다. 각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역발전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제대로 된 국가발전이 가능하다. 이제는 도로 · 건물 등 하드웨어 보다는 교육 · 의료 · 문화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역발전정책이 나와야 한다. 지방소비세 · 지방소득세 도입은 '시작이 반' 이라는 생각으로, 지방과 중앙이 함께 성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토론요지 ① – 기초생활권 발전시책 및 지방교육 활성화

··시 · 군의 주체적 발전을 지원하는 포괄보조금제는 지방분권의 실질적 확대와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는 계기인 만큼 지방자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선진적인 제도로 평가하고 싶다. 향후 성공적인 운용을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류화선 지역委 위원(파주시장)

··지난해 지리산권 3개 도, 7개 시 · 군이 영호남 화합을 상징하는 사업으로,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앞으로 7개 시 · 군이 협력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길 부탁한다 최중근 남원시장

··지방분권은 잘 되어가고 있지만, 더 많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행정체제 개편은 지방분권이 목적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분리되어 있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일원화도 검토해야 한다 신도철 지역委 위원(숙대 경제학부 교수)

토론요지 ② –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지자체는 현재 지방재정의 심각한 악화로 자주재원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방소비세 · 지방소득세 도입이 지방세 확충의 계기가 된 점을 환영한다.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로 지방의 자주재원이 확충되기를 기대한다 박광태 광주광역시장

··농어촌 학생 감소에 따른 농어촌 학교 통폐합이 지역주민 감소와 함께 결국에는 지역경제 기반쇠퇴라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일률적인 농어촌 학교 통폐합은 전국 어디서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재고해야 한다 김영희 지역委 위원(전국주부교실 제주지부 회장)

··광역경제권은 지자체간 협력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협력경험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다. 광역경제권이 성공하려면, 권역별 대도시의 활력증대가 아주 중요하다. 또 투자의 방향도 H/W가 아닌 S/W로 확실히 전환해야 한다 홍철 지역委 위원(대구경북연구원장)

정책 포커스

광역위원회 , 사무국 진용 갖춰 공식출범 -사무총장 선임 · 현판식 추진 · 업무편람 발간-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이하 광역위원회)가 사무국 진용을 갖추고, 공식 출범했다. 권역별로 광역위원 총101명 선임(6.9), 사무총장 7명 선임(9.4), 현판식(9월중) 추진, 업무편람을 펴낸 데 이어, 사무국 조직활성화 워크숍(9.17~9.18)을 개최하는 등 업무를 개시했다.

사무총장은 지난 9월 초 채용공고와 면접을 거쳐 5개 권역에 대한 선임을 마쳤다. 신규 채용된 사무총장은 ▶수도권 강래천(前평택부시장) ▶충청권 권오창(前대한주택보증사장) ▶호남권 최영기(前반월시화 혁신클러스터 추진단장) ▶동남권 옥우석(前국세심판원 행정실장) ▶대경권 박광길(前대구시 신기술산업본부장) 등 5명이다. 강원권과 제주권은 道기획관리실장이 겸직한다. 선임된 사무총장은 광역계획 수립, 연계협력사업 발굴, 관리평가 등 광역경제권 실무를 지휘 · 감독하게 된다.

현판식은 대경권(8.31)과 충청권(9.21)을 시작으로 10월중 수도권 · 동남권 · 호남권 현판식이 이뤄지고, 사무국 입지도 △서울 을지로(수도권) △대덕 연구단지(충청권) △광주 TP(호남권) △부산 경륜장내(동남권) △대구 TP(대경권) △道청사(강원권 · 제주권)로 각각 결정됐다.

지역委는 광역위원회 사무국 조직 활성화를 위해 조직목표 공유를 위한 Team Building과 해외사례 벤치마킹, 기획평가관련 직무역량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광역위원과 사무총장 연찬회를 통해 광역위원회의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대경권 광역위원회 현판식

"市·郡이 탄탄해야, 나라가 튼튼합니다"

- 163개 시·군 「기초생활권」의 중요성 -

지역발전의 최종목표는 5,000만 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전 국민의 54%가 살고 있는 163개 시·군 「기초생활권」을 지역委가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광역경제권(지역경쟁력)과 초광역개발권(국가경쟁력) 추진의 궁극적 목표도 결국은 의식주·교육·의료·문화 등 일상생활 터전인 기초생활권의 풍요로움입니다. 이런 뜻에서 지난 9월 16일 지역委가 대통령께 보고한 '기초생활권 발전시책'은 MB정부 지역정책의 중요한 핵심 전략입니다.

현재 우리 농산어촌의 모습은 초라합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심각합니다. 일반市 인구는 증가(36.3%)해도, 郡 인구는 감소(-14.7%)하고, 일반市보다 郡 고령화율은 3배나 높습니다. 종합병원·병상수·의료인력은 태부족이고,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거나 분만시설이 없는 郡이 39개나 됩니다. 일반市보다 郡 상하수도 보급률·노후주택률 또한 2배 이상 부족한 것이 2009년 오늘 대한민국 163개 시·군의 열악한 현실입니다.

이번 대통령보고는 지역발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시·군을 〈꿈있고 살고픈 기초생활권〉으로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키워드는 「기초생활권」의 자생력과 삶의 질입니다. 먼저 地域은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야 합니다. 자연·역사·문화 등 지역자산을 관광자원화·브랜드화해 꿈이 넘치는 지역을 만들고자 합니다. 政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의료·문화·복지수준을 개선함으로써, 살고 싶은 기초생활권 창조를 앞당길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역개발은 H/W중심·중앙정부 주도로 이뤄졌습니다. 도로·건물 등 H/W위주의 사업 추진으로 교육·의료·문화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소홀했습니다. 또 중앙정부가 주도하면서, 지역의 창의성과 자율성도 상당부분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을 S/W중심·지역체제로 확실하게 바꿔야 합니다. 우리 지역委가 그 변화의 선두에 서겠습니다.

지역委 3차원적 지역발전 정책에서 「기초생활권」은 주춧돌과도 같습니다. 이 탄탄한 주춧돌 위에 세우는 큼직한 두 기둥이 바로 광역경제권과 초광역개발권입니다. 주춧돌로서의 기초생활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5,000만 전 국민이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대한민국은 163개 시·군 「기초생활권」에서 시작됩니다. 시·군이 탄탄해야, 나라가 튼튼합니다.

위원장 최상철

지역委 기초생활권 정책포럼 결과요약

-교육·의료·복지 인프라 부족 및 내발적 발전역량 강조-

지역委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7차에 걸쳐 기초생활권 정책포럼(이하 정책포럼)을 개최, 마을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대안들을 모색했다. 이를 위해▶기초생활권의 삶의 질 보장과 소득창출을 위한 시책개발 ▶지역간 연계·협력 촉진방안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하여 지역개발 활성화 방안 등을 폭넓게 토론했다. 특히 △지방교육경쟁력강화 △의료·복지의 기반구축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지역자원의 융·복합화에 의한 소득기반 확충방안 등을 검토했다. 또 읍·면 단위의 자주적 발전책으로서 LIS(Local Innovation System, 지방혁신체계) 구축방안도 논의했다. 향후과제로는 LIS·창조지역의 거버넌스 구축, 자연·문화·역사 등 지역자원 활용 등 내발적 발전이 특히 강조됐다.

유익한 의견들도 제시됐다.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한 하천법 개정 필요성이 개진됐고, 지방공공의료 인프라 부족 등 특히 종합검진기관(태안), 민간의료기관(신안)이 전무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도서지역 등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장비·인력 보강문제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농어촌 보육시설, 다문화 가족센터 등 복지기반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의 필요성도 빼놓을 수 없다. 지역委는 앞으로도 이같은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이번 기초생활권 정책포럼과 같은 소통의 기회를 더 확대할 방침이다.

충청권 부여군, 굿뜨래 멜론 해외진출 탄력

▲부여 굿뜨래 멜론

부여 굿뜨래 멜론이 해외시장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수출에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9월 부여군에 따르면, (주)농협무역은 오는 11월 초까지 매주 40피트 2대씩 총 18회에 거쳐 180톤, 4억원 상당을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지난 9월 1차분 13.5톤을 선적한 부여군은 바이어 초청상담, 박람회 참가, 수출시장 동향분석 등을 추진해 까다로운 일본시장에 매년 수출하는 성과를 보였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 8월초 대만 수출을 개시한데 이어 11월초까지 일본에 4억원 상당을 수출, 굿뜨래 멜론 10억원 수출목표 달성을 앞두고 있다. 굿뜨래 멜론은 부여농협연합사업단이 중심이 되어 부여농협연합사업단이 중심이 되어 부여농협 등 4개 회원농협과 멜론 연합작목회가 참여해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제 등 선진 유통시스템을 갖춰 국내외 바이어로부터 좋은 이미지와 상품성을 인정받았다.

보령시, 보령 돼지고기 세계화 다시 추진

보령시가 돼지고기 해외수출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보령시는 양돈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돼지고기 수출재개를 위해 지난 9월 양돈농가, 축협, 수의사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한 방역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육되고 있는 돼지 전부를 예방 접종, 돼지열병을 종식시키고, 청정화를 유지해 오는 2015년 돼지고기 수출을 재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령지역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는 지난 2000년까지 일본, 러시아, 필리핀, 유럽 등 세계 각 국에 수출됐으나, 돼지열병과 구제역 발생으로 수출이 중단됐었다. 이 때문에 양돈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청정화가 이뤄지면 수출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국내 돼지고기는 2003년 전국적인 돼지열병 발생으로 해외수출이 중단됨에 따라, 당국에서는 2010년까지 돼지열병 박멸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동남권 창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창에 그린' 선정

창원시는 지난 9월 농산물 공동브랜드개발 추진협의회를 열어, 창원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창에 그린'으로 확정했다. 농산물 개방에 대응하고 우수한 창원 농산물의 차별화,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판매촉진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현재 35개로 난립돼 있는 개별브랜드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창에 그린'은 람사르 환경올림픽을 개최했던 환경수도 창원의 깨끗함과 녹색도시와 철새 낙원지인 주남저수지의 이미지가 잘 반영된 이름으로 특허청 상표등록 등 절차가 완료되면 조례 등을 제정, 내년부터 농산물에 사용할 계획이다.

창에그린
昌原 주남의 땅 · 녹색환경 창원의 명품농산물

대경권 경북, 동해안 10대 명품탐방로 조성

경북도가 동해안 10대 명품관광 탐방로를 개발한다. 경북도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국비(527억여원)와 지방비(도비 263억여원, 시군비 263억여원) 등 1,044억원을 들여 동해안 5개 시 · 군(해안선 총길이 339.6㎞)에 125.8㎞에 걸쳐 관광탐방로를 개발하기로 했다. 동해안 10대 명품 관광탐방로는 포항 '오션 르네상스' 등 2곳, 경주 '문무대왕 호국탐방길' 등 2곳, 영덕 '에코-50 탐방로' '고래불 가는 전통마을길', 울진 '쪽빛 바닷길' 등 2곳, 울릉 '시걸(Seagull, 바다갈매기) 하포리운웨이', '나리 자드락길(바다가 내려보이는 길)' 등이다. 경북도는 ▶탐방로 정비 ▶거점자원과 주변자원간 연계 ▶시군별 일주노선 정비 등 순차적으로 명품 탐방로를 개발할 방침이다.

시 군	탐방로명
포항시	Ocean Renaissance 탐방로
	빛과 연인의 거리
경주시	문무대왕 호국탐방길
	감포 푸른 벼룻길
영덕군	Eco-50 탐방로
	고래불 가는 전통마을길
울진군	쪽빛바닷길
	불영 따라 나그네길
울릉군	Seagull 하포리운 Way
	나리 자드락길

▲동해안 블루로드 관광 탐방로 10선

강원권 중복규제 토지 이용가치 높인다

강원도가 규제완화를 통한 토지 이용가치 극대화 및 지역균형발전, 녹색성장 프로젝트를 통한 관광자원 육성을 내년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한다. 또 강원도내 2시간대 생활권이 터널화와 국도 확장을 통해 내년에는 완성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 9월 '2010년도 건설방재분야 시책간담회' 를 열고, 내년부터 용도가 불합리한 594.65㎢에 대한 조정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는 군사시설보호구역 · 자연공원구역 등으로 중복규제를 받고 있는 도내 토지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토지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강릉 · 속초 · 인제 · 고성 · 양양지역을 대상으로 한 '설악관광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녹색성장 프로젝트로는 4대강 살리기를 통한 관광자원 육성, 산소길 · 자전거길 강원 3,000리 조성, 친환경 인증 건축물 확대 등이 추진된다.

호남권 전남, 사계절 전지훈련장으로 각광

▲전지훈련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해남군 우슬경기장

전남도가 사계절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 9월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7~8월 2개월간 역도와 탁구 국가대표팀 등 총 145개팀 연인원 2만 7,328명이 전남지역에서 하계전지훈련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경제유발효과는 1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남도는 추정하고 있다. 지난 겨울에는 1,337개팀, 연인원 46만 6,397명을 유치해 256억원의 경제효과를 거뒀다. 이처럼 전남지역이 사계절 전지훈련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겨울철 온화한 기후를 바탕으로 동계 전지훈련단을 유치하기 위해 꾸준히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또 도와 일선 시 · 군이 경기연맹단체와 팀 등과 자매결연 추진 등을 통해 전지훈련팀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목포시, 관광목포 콘텐츠로 빛낸다

목표시가 상징 조형물설치와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등 목포관광상품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 9월 열린 관광문화국의 2010년 업무계획보고를 통해 목포시의 대표 이미지를 활용한 랜드마크 조형물을 제작 · 설치해 문화관광을 위한 테마상품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상징조형물은 1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높이 10~12m, 폭 4~5m 규모로 대반동이나 소삼학도 일원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안에 포항시의 '상생의 손' , '춘천시의 소양강 처녀상' , 예산군의 '사과 조형물' , 강릉시의 '홍길동 조형물' 등 타 자치단체의 조형물을 벤치마킹한 뒤 오는 12월 조형물 설치기본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 1월 공모를 거쳐 3월중 공모작 심사와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2010년 10월1일 시민의 날에 맞춰 제막식을 가질 예정이다. 목포시는 또 지역내에 산재해 있는 근대 문화유산에 대한 '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권 2012 세계자연보존총회 유치 서명 110만 돌파

2012년 개최되는 제5차 세계자연보존총회(WCC, World Conservation Congress) 제주유치를 기원하는 '범국민 100만인 서명운동' 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9월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7월29일부터 본격화된 서명운동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11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전국 각계 각층 인사와 시민사회단체, 금융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에 힘입은 것으로, 제주도민과 제주입도 관광객 38만2,000명, 도외인 72만1,500명, 외국인 450명 등이다. 특히 이번 서명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형오 국회의장,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이홍구 전총리, 유명한 외교통상부장관, 이만의 환경부장관, 김형국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도 동참했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집계되지 않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서명실적을 수합할 경우, 서명인원은 13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경기회복 지속 위해 4/4분기 예산 조기 집행

〈 09년 분기별 집행실적 및 계획 _주요사업비 기준 〉 (단위:조원)

	1/4 (실적)	2/4 (실적)	3/4	4/4	합 계
당초 계획 (a)	83.6	87.9	43.6	57.7	272.8
수정 계획 (b)	83.6	87.9	53~55	45~47	272.8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이용걸 제2차관 주재로 제14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개최하고 8월말까지의 재정집행 실적 및 3/4분기 재정집행 현황을 점검하였다. 8월말까지 재정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총199.3조원을 집행하여 당초계획 194.8조원에 대해 4.5조원을 초과 집행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4대 중점관리 분야에는 59.5조원을 집행해 당초 계획인 53.2조원에 비해 6.3조원(집행률 111.8%)을 초과 집행하였다. 기획재정부는 경기회복 흐름 지속을 위해 3/4분기에는 4/4분기 예산중 10~12조원을 앞당겨 집행하고, 철저한 재정집행 점검을 통해 연말 불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 지능형 홈 1단계 시범사업 실시

지식경제부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산업기반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66억원을 투자해 기축건물 1,617가구에 지능형 홈서비스를 보급하는 '지능형 홈 1단계 시범사업' 을 추진한다. 이 서비스는 수도권-그린홈 서비스, 경남권-노인 건강관리 홈케어 서비스, 호남권-IPTV 등 지역별로 특화된 내용으로 제공되며, 대상 가구는 ▶네트워크 시설이 미비한 저소득 임대아파트 가구(수도권) ▶FTTH 시범사업 가구(호남권) ▶독거노인 및 영세 소외계층 가구(경남권) 중에서 선정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자들은 무상으로 지능형 홈서비스를 제공 받게 되지만, 서비스 관련 피드백의 의무를 지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사업으로 기존 주택의 홈네트워크 기반을 활성화하고, 지능형 홈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하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주도형으로 지자체 규제개혁 틀 개선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 회복기조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을 지방주도형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지자체 담당자가 규제개혁 협의과정에서부터 참여해 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고, 부처의 검토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제개선전문가 TF를 설치해 사전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규제 개선 위주였던 기존 개혁방향을 서민생활과 국정과제에 중점을 두는 투 트랙(two-track) 시스템으로 전환해 국민생활 속의 작은 문제부터 新성장동력 등 규제개선 효과가 큰 과제까지 사안의 우선순위와 경중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건의과제에 대해 검토 · 처리상황 · 사후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부처와 지자체 공무원이 참여하는 규제개혁지원단 회의도 정례화 된다. 지자체가 규제과제를 발굴하면 행안부가 이를 검토하고, 다시 부처와 행안부가 일괄협의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던 이전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지역 공모

국토해양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기초지자체 대상으로 단독 등 기존 주택에 대한 주거서비스 지원센터인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지역을 공모한다. 해피하우스 사업은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위 주관으로 추진 중인 뉴하우징 운동의 핵심사업으로 공동주택의 주거서비스 문화를 단독주택에 확산시켜, 기존 주택의 에너지 효율개선 · 관리비용 절감 및 주거향상 등을 도모하는 지역밀착형 주거서비스 지원 사업이다. 해피 하우스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이 해피하우스에 상주하면서 ▶에너지 성능검사 및 개선 컨설팅 ▶누수 · 누전 · 동파 등에 대한 긴급서비스 ▶창호 · 전기 · 화장실 등의 간단한 수리 · 교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향후 주거복지 전달체계 통합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 마을가꾸기 등 주거복지 사업간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모대상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이며, 응모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2009년 9월 11일부터 10월 9일까지 국토해양부로 신청서를 공문접수하면 된다.

교육과학기술부 지자체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지원

교육과학부는 2009년도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대상으로 기초자치단체 70개, 광역지자체 6개를 선정해 총 8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사업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구축 지원사업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컨설팅 지원사업 등 4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올해는 광역단위 평생학습 추진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의 평생학습 인프라구축 지원분야를 신설해 광역시 · 도의 관심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 평생학습도시 지정 현황 〉

지 역	학습도시	기초지자체	'01	'02	'03	'04	'05	'06	'07
서 울	7	25	-	-	-	관악구	양천구 성북구	영등포구	강동구 강서구 마포구
부 산	3	16	-	해운대구	-	-	-	연제구	사상구
대 구	2	8	-	-	-	-	달서구 동구	-	-
인 천	3	10	-	-	연수구	-	부평구	남 구	-
광 주	3	5	-	-	-	-	남 구	동 구 광산구	-
울 산	2	5	-	-	-	-	-	울주군	중구
경 기	11	31	광명시	부천시	-	이천시	수원시 구리시	안산시 용인시 시흥시 평택시	과천시 안양시
충 남	7	16	-	-	-	금산군	부여군	태산군 아산시 서산시	천안시 서천군
충 북	4	12	-	-	-	청주시	제천시 단양군	진천군	-
충 남	7	16	-	-	-	금산군	부여군	태산군 아산시 서산시	천안시 서천군
전 북	7	14	진안군	-	-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군산시
전 남	7	22	-	-	순천시	목포시 (신안무안)	-	여수시 광양시 곡성군	강진군 영암군
경 북	4	23	-	-	안동시	칠곡군	-	-	구미시 경산시
경 남	8	20	-	-	거창군	창원시	김해시 남해군	양산시 하동군	진주시 통영시
제 주	2	0	-	제주시	서귀포시	-	-	-	-
합 계	76개	230개	3	3	5	8	14	24	19

* 2008년부터 신규 지정 없음

농림수산식품부
2010 서울 떡볶이 페스티벌 준비 박차

농림수산식품부는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와 함께 지난 9월초 떡볶이 연구소에서 '2010 서울 떡볶이 페스티벌 추진단' 출범식을 갖고 공식업무에 들어갔다. 지난 3월 '2009 서울 떡볶이 페스티벌' 은 5만600명이 관람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특히 젊은 연인, 가족 등 다양한 계층이 행사장을 찾고, 외국인들이 떡볶이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등 떡볶이 산업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3월 페스티벌에서는 연구개발 201건, 제품납품 337건, 점포개설 244건 (현장계약 7건) 등의 실적도 나왔다. 농식품부는 '2010 서울 떡볶이 페스티벌' 의 종합기획, 전시연출, 홍보 등과 관련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제2회 '세계 떡볶이 빨리 먹기 대결' 등의 방송프로그램 참여를 검토하고, 홈페이지(topokki.co.kr)을 통해 국민들의 참여 아이디어도 수렴할 계획이다.

▲2009 떡볶이페스티벌 포스터와 캐릭터

보건복지가족부 2009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9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전국 자치단체별로 선정된 표본가구 주민 90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주민의 건강수준과 건강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해당지역에 적합한 보건산업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적인 지역별 조사가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조사내용과 조사수행체계를 표준화하고, 상시적인 중앙기술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조사내용은 전문가 및 관계기관 회의와 지역별 수요도 조사를 거쳐 확정되었고, 주민의 건강상태와 유병상태, 건강생활습관, 의료이용, 삶의 질, 사회경제적 상태 등이 포함돼 있다.

해외정책 사례연구 - 일본 기초생활권

실패한 유바리市 VS 성공한 오타루市

- 유바리市, 스키장·리조트 등 무분별한 과잉투자
- 오타루市, 운하·창고 등을 문화공간으로 재창조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市는 일본 최초의 파산한 지자체로 유명하다. 유바리 국제판타스틱 영화제, 유바리 멜론으로 친숙한 이 도시는 멜론중심의 농식품가공업, 국제판타스틱 영화제 중심의 관광산업에 투자해왔다. 하지만 관광시설에 대한 과잉투자는 4,800억원이 넘는 빚만 남겼고,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

유바리市의 파산은 무분별한 과잉투자가 원인이었다. 주력산업이던 석탄산업 쇠퇴와 경기침체, 인구유출에 시달리던 이 도시는 1980~90년대 '탄광에서 관광으로'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석탄박물관, 스키장, 리조트 등 20여 개의 대규모 관광프로젝트로 지역부흥을 꾀했다. 폐광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발상은 좋았지만,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주먹구구식 경영이 문제였다.

홋카이도의 또 다른 도시 오타루市의 전략은 달랐다. 1910년대 조성된 운하가 많은 근대 개항도시 오타루市는 해산물과 농산물들이 집중되는 물류거점도시다. 오타루도 유바리처럼 관광을 전략산업으로 키웠다. 하지만 오타루는 새로운 관광시설에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았다. 기존 운하와 창고 등 근대 건축물을 재활용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도심을 활성화시키면서, 도시정체성을 지키고 있다. 오타루市는 운하와 창고를 찻집이나 레스토랑으로 재활용해, 과거의 향수를 부르는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불필요한 과잉투자는 삼가고, 오히려 있는 자원을 철저하게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도시경쟁력을 새롭게 갖춘 것이다.

유바리와 오타루사례는 우리의 기초생활권 정책추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MB정부의 기초생활권 정책에 힘입어, 우리도 이제 기초생활권 163개 시·군이 1년에 100억에서 많게는 200억까지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무분별한 과잉투자의 우려다. 지역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 단체장들이 과도한 부채를 떠안고서라도 많은 개발사업에 몰두할까 우려된다. 사업타당성을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투자하는 것은 도박이나 다름없다. 계획성 없는 사업추진은 돈먹는 하마로 전락, '한국판 유바리市' 가 될 확률이 높다.

유바리市는 요즘 일명 반면교사(反面教師) 투어로 불리는 '유바리 다큐멘터리 투어' 란 또 다른 관광상품을 팔고 있다. 유바리의 몰락과정을 소개하는 이 관광상품은 2007년 가을부터 여러 국내외 지자체들이 유바리를 찾게 만들고 있다. 실패한 유바리를 반면교사로 삼고, 성공한 오타루의 지역특성에 맞는 자원활용 전략을 배우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때다.

▲오타루 운하의 창고들

▲오타루에 위치한 창고를 개조한 고급 레스토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박주영